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3. 9. 14.(목) 배포 즉시

정부는 공공기관 노사 간 자율교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9. 14.(목) 한겨레, ILO '노정교섭 제도화' 권고에도 뭉그적대는 정부

> ㅇ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에 노정교섭 제도화를 권고했다. 중앙정부를 사실상 '사용자'로 보고 교섭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. 그러나 정부는 아이엘오 권고에도 후속조처를 마련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이다.
>
> ㅇ 이는 지난해 6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, 국제공공노련이 아이엘오 기본협약 제98호(단결권·단체교섭권)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제소한 데 대해 아이엘오가 노조쪽 손을 들어준 결과다.

2. 설명 내용

□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된『결사의 자유 위원회』권고는 **정부를 사용자로 보아 교섭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님**

ㅇ 권고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침이 **'공공기관의 단체교섭'에 개입하지 않도록**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(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)이 참여할 수 있는 **정례 '협의'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요청**한 것으로

ㅇ 중앙 정부가 공공기관 노조와의 **교섭 의무가 있음을 인정**하거나, **교섭 당사자로서 직접 교섭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 것이 아님**

□ 또한,『결사의 자유 위원회』진정 절차의 목적은 개별국가에 대해 제기된 진정이 **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**하고, **노사정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장려**하기 위한 것이며

ㅇ 이번 권고에서도 **우리나라의 제98호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**

* (결사의 자유위원회 판정집, 2018, 5문단)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절차의 목적은 건설적인 노사정 대화를 통해 법·관행상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는 데 있다.

□ 다만 관련 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권고의 취지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 중임

담당 부처	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정해영 (044-202-7129)
		담당자	서기관	권순지 (044-202-7133)
담당 부처	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공공제도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유정 (044-215-55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중민 (044-215-553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